

동물보호교육으로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018 교육감선거 후보 대상 정책질의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이하 카라)는 2018 교육감 선거를 맞아 각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이는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국사회에 필요한 동물보호교육 정책을 제안하고, 각 정책에 대한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카라는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을 존중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 후보의 답변을 정리하여 언론 및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본 질의서는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 △교내 동물사육 관리 등 총 다섯 개의 주제에 대한 정책 제안 및 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의에 선택형 답변을 먼저 표기해주시고, 되도록 구체적으로 의견을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사회의 교육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유익한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회신기한 : 2018년 5월 23일(수요일), 오후 6시
- 회신처 : (이메일) edu@ekara.org / (팩스) 02-3482-8835
- 담당 : 카라 교육아카이브팀 김명혜 팀장 (070-4760-1201)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는 2018년 6월 1일부터 '사)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임순례)로 단체 명칭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교육 내 동물보호교육 의무화

실태 : 2012년 전국 동물보호 인식 조사에서 동물보호 수준 변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꼽은 것은 ‘초등학교 교과과정의 동물보호교육 (33.3%)’ 이었습니다.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카라에서 진행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2020년까지 꼭 생겼으면 하는 것 3위로 동물보호 교육 의무화’,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만들고 싶은 법 1위로 동물보호교육법 마련’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생명존중 동물복지 교육 자료를 연구하여 개발/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동물보호 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되기를 원한다는 시민들의 요구 대비 현재는 일부 의지가 있는 지자체(강동구청 등) 및 기관(인천대교 사회 공헌팀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동물보호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 : 생명존중 감수성 함양과 인성교육으로 이어지는 동물보호교육의 필요성과 수요에 비해, 공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동물보호교육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수업에 연계할 수 있는 자료 및 사례가 많지 않고, 동물보호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연수 등의 제반 사항이 부족하다 보니, 단발성 혹은 외부 교육으로 대체됨에 따라 실제 교육적 의미와 효과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의 : 카라는 교육감의 동물보호교육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 집단 기반 교육 자료 연구, 교육자 대상의 생명 감수성 교육/연수 과정 수립 그리고 초중고 교육과정 내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보호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택형 답변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추가 의견			

2.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실태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11만 5천 마리에 달합니다.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이 불필요하며 비윤리적이라는 다수 시민의 의견에도, 여전히 많은 학교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해부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의락 의원은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는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조항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의 금지)는 정작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인 초·중·고교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문제 :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은 수많은 동물에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초래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 충격과 죄책감을 줍니다. 생명을 도구로 보게 하는 동물해부실습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한, ‘생명존중’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 등)하거나, 해부모형을 활용한 대체실습을 보장(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관련 법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질의 : 카라는 한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험이나 교육을 위해 동물해부실습을 진행해 온 기존의 관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육청이 관할지역에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리고, 각 학교가 대체실습을 위한 동물해부모형을 구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택형 답변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추가 의견			

3. 농장동물 복지를 고려한 급식

실태 : 한국 축산업의 99%가 공장식 밀집 사육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공장식 축산은 대량생산과 관리편의를 위해 농장동물들은 평생토록 몸도 돌릴 수 없는 좁은 케이지에 가두어 사육합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키워진 닭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쉽게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조류독감과 정부의 예방적 살처분 정책 시행으로 해마다 수천 마리의 생명이 땅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소위 ‘살충제 계란’ 사태로 먹거리 안전성의 허점이 드러나 국민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으며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제 : 고기의 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은 일상에서 동물을 위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에서 고기를 주된 재료로 사용하거나 고기를 곁들인 반찬이 대부분이며 우유 급식도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에서 비육식 선택권 보장은 중요합니다. 또한, 공장식 축산 방식이 아닌 동물복지농장 축산물을 소비하는 윤리적 육식 또는 채식 확산을 시행하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질의 : 카라는 학교 급식에서 비육식 선택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 1회 채식 급식 또는 채식인을 고려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선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 정착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환경문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교급식에서 동물복지축산물의 수요를 높이면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축산으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 학교가 급식에서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수요를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택형 답변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추가 의견			

4. 동물의 고통 없는 생태체험

실태 :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 2015년 3월 30일 기준, 국내에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은 전국에 59개 있습니다. 그중 동물에게 직접 먹이를 주거나 만질 수 있는 체험동물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동물과 교감하며 동물을 더욱 깊이 있게 알게 하려고 현장학습장으로 체험동물원을 선택합니다. 교육현장의 대다수 학생은 동물원을 다녀온 경험이 있고, 먹이 주기 체험을 하거나 실제로 동물을 만지는 등 체험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 : 2016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동물원법'이 제정되었지만, 누더기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로부터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항목이 없어 단체관람으로 동물원 또는 체험동물원을 찾는 학생들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체험동물원은 대부분 "궁금하면 동물은 만져도 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해 일회용품처럼 사용되고 버려지고 있습니다. 동물과 교감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고자 체험동물원을 찾지만, 교감 이면에 있는 동물들의 희생과 고통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질의 : 동물을 쉽게 만지거나 다룰 수 있는 체험동물원은 현장학습 장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체험동물원이나 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생태체험 대신, 자연 속 동물의 습성을 담은(동물의 생태적 특성이 담긴) 영상이나 다큐멘터리 등 대체 가능한 자료를 통해 배우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학습 장소로 동물원을 방문해야 한다면 동물복지 전시 기준을 준수하는 비체험 동물원을 선택하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택형 답변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추가 의견			

5. 교내 동물사육 관리

실태 : 초·중·고교에서 동물 생태 학습과 생명 감수성 향상의 목적으로 교내 사육장을 설치해 토끼, 닭, 새 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의 운영지침 없이 운영되는 교내 사육장은 오히려 동물의 생태를 고려하지 않은 환경으로 조성되고, 관리 담당자가 불투명하여 동물이 방치되기도 합니다. 이를 ‘동물학대’로 바라보는 시민들은 동물단체에게 제보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 : 동물 본성에 적절한 크기의 공간, 깨끗한 물과 영양을 고려한 음식, 본능적 행동 발현 자유, 동물이 자신을 보호할 자유 등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사육 환경은 국내 동물원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동물을 가두어놓고 일방적으로 만지고 관찰하는 것은 ‘교감 학습’이 될 수 없습니다. 동물원에서조차 동물의 정형행동(이상행동)이 나타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생은 고통스러운 동물의 모습을 통해 동물 생태, 생명 감수성과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없습니다. 또한, 교내 사육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해도 교내 사육장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질의 : 카라는 학생과 동물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하여 교내 동물사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관할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생태 친화적인 환경으로 조성하도록 하여, 교내에서 서식하는 새, 곤충, 길고양이 등을 학생이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같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다른 생명을 돌보는 생태 및 동물 보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교육감에 당선된다면 이를 실현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택형 답변	☐ 그렇다	☐ 아니다	☐ 모르겠다
추가 의견			

이제 다섯 개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 성심껏 답변해주신 후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성해주신 답변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카라도 이후 답변을 정리하고 전달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후보자명 :
- 담당자명 :
- 연락처 :

교육감 후보 본인이 직접 질의서를 확인하고
소신에 따라 답변하였음을 약속드립니다.

2018. 0. .

교육감 후보

(인)